

Market Intelligence

- 2017 세계 경제 이슈 및 파급 영향 -

I. 보호무역주의 등 반세계화 기조 심화

1.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현황
2.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
3. 미·중간 통상분쟁 전개 방향
4.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II. 미국의 금리인상 전개 방향과 영향

1. 미국의 금리인상 방향
2. 금융시장의 영향
3. 주요국 및 신흥국 영향
4.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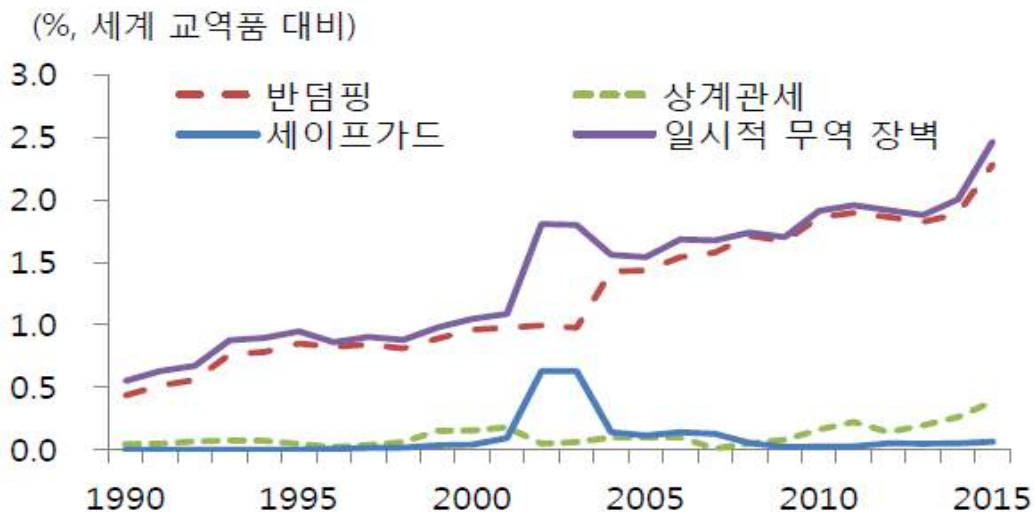
I. 보호무역주의 등 반세계화 기조 심화

1.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현황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에 따른 고용 및 소득증가율 부진 등으로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흐름 대두
 - (브렉시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지역에서 신흥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복지 수혜에 대한 반감으로 EU 탈퇴 결정('16. 6)
 - (미 대선) 제조업 사양화로 '러스트벨트(중서부 제조업 지대)'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로 '반세계화' 무역·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당선('16. 11)
 - (유럽 극우 열풍) '17년 주요 선거를 앞둔 유럽에서는 反EU주의 성향 보수정당들이 모두 상승세
 - '17년 3월 의회선거를 앞둔 네덜란드에서는 反이슬람· '네렉시트(네덜란드 EU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자유당이 지지율 1위, 4월 대선인 프랑스에서도 유로화 탈퇴·반이민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1위 기록 중
- 자국 제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 무역장벽 증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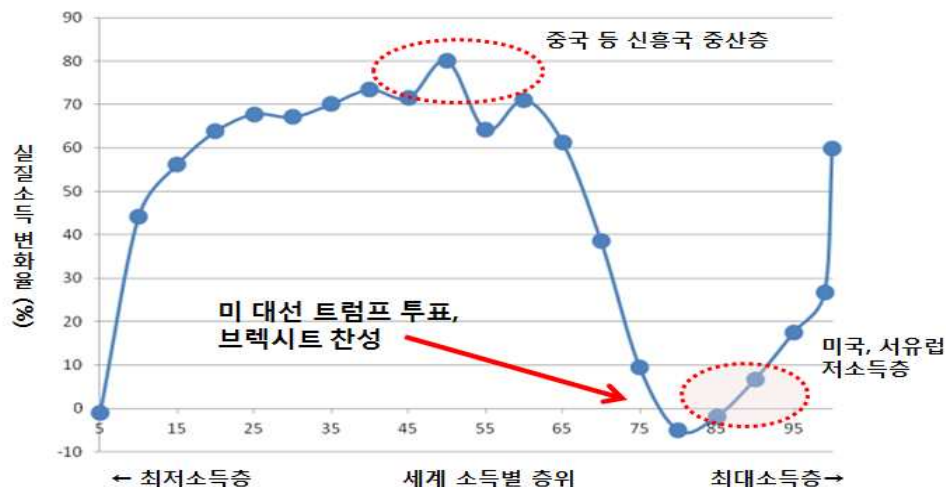
- 세계교역품 중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품목이 2014년 2% 수준에서 2015년 2.5%로 상승
 - 특히, 미국의 신정부가 NAFTA 재협상, 중국·멕시코에 대한 관세장벽 강화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 보호무역 경쟁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 37('14) → 64('15) → 48('16.1~8월)

2.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

□ 세계화 및 선진국 제조업 붕괴로 소득 양극화 심화(중산층 붕괴)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대 및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전체의 부는 증대되었지만 소득 격차 및 불평등 확대
- 1988~2008년간 세계 소득계층의 실질 소득은 평균 20% 이상 증가했지만, 실질 소득이 하락한 미국과 서유럽의 저소득층(세계 소득층위 상위 15~25% 계열)의 불만은 심화
 - 중국과 신흥국의 중산층,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상위층이 60~80%의 높은 실질 소득 증가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
-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았던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를 겪으며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책적 한계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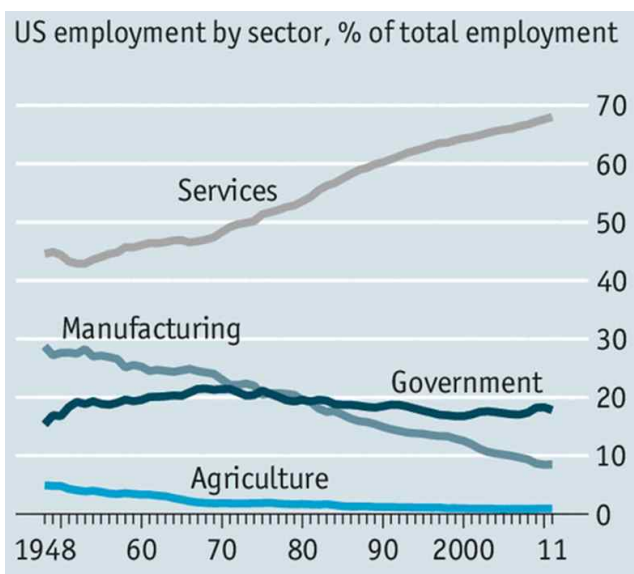
< 세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율(1988~2008) >



자료 : World Bank (Branko Milanovic, 2012)에서 인용, 재구성

-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의 위축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며 중국 등 제조업 수출 신흥국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킴
-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의 기반이 신흥국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약화되며 불평등 확대
- 미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2010년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저임 및 비정규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은 70%에 육박

< 미국 산업별 고용비중 >



< 미국 자동차산업 고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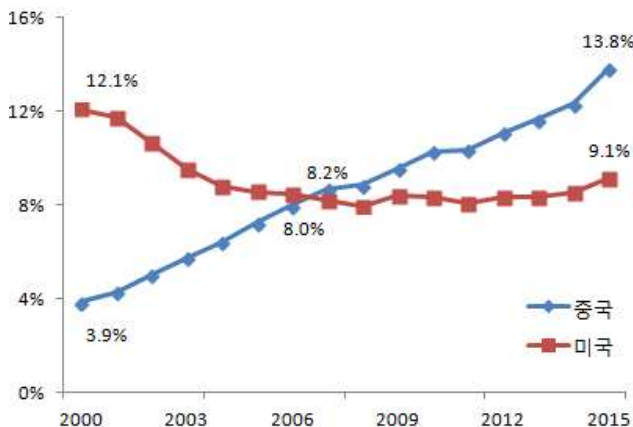


3. 미·중간 통상 분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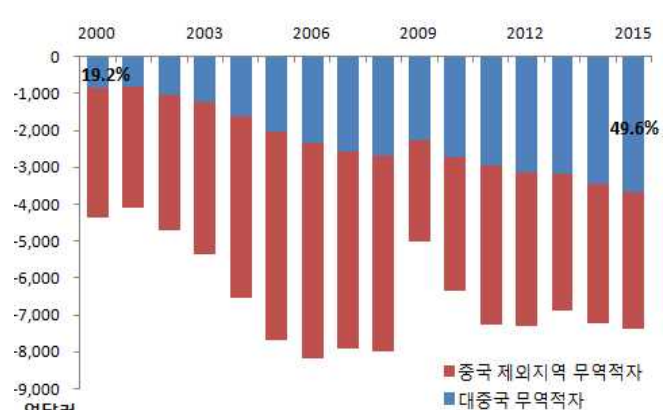
-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는 미·중간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표출될 전망
-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 및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성 증대에 있다고 판단
 - 미국의 무역적자는 감소 추세이나 대중국 적자는 2015년 기준 3,650억 달러(적자 비중 50%)로 사상 최대를 기록
- 중국은 철강 등 호황기에 확대된 산업의 공급과잉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 중국이 추진하는 중속 및 내수중심적 성장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투자된 산업의 안정적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
-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중국산 냉연강판과 도금판재류 등에 각각 522%, 451% 관세 부과(16. 5. 17), WTO에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불법지원 혐의 조사 등을 요청

< 세계 무역 중 미·중 비중 >



< 미국 對중국 무역적자 >



(참고자료 1 참고)

○ (미국 전략) 무역구제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환율조작국으로 제재 등 활용

- 트럼프 후보는 중국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관세 부과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더욱 활용할 것으로 예측
- 중국에 WTO 협정*상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등으로 철강 등 중국산 저가 제품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할 전망

* 2001년 12월 중국 WTO 가입시 체결한 가입의정서 15조2항은 **중국에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중국은 15년 경과시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주장해왔으나** 미국과 EU는 반대

** **중국**이 비시장경제로 취급될 경우 수출가격 덤핑 여부를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사용해 판정이 쉽지만,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으면 중국 국내가격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덤핑 판정이 어려워짐.

- 또한 대중국 적자 확대·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 제재 관련 입법 가능성*도 있음.

*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환율 절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 가능

<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요건 및 현황 >

	독일	중국	대만	한국	일본
①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유지	○	○	○	○	○
② 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	○	○	×	○	○
③ 외환시장의 일방적, 반복적 개입	×	×	○	×	×

주: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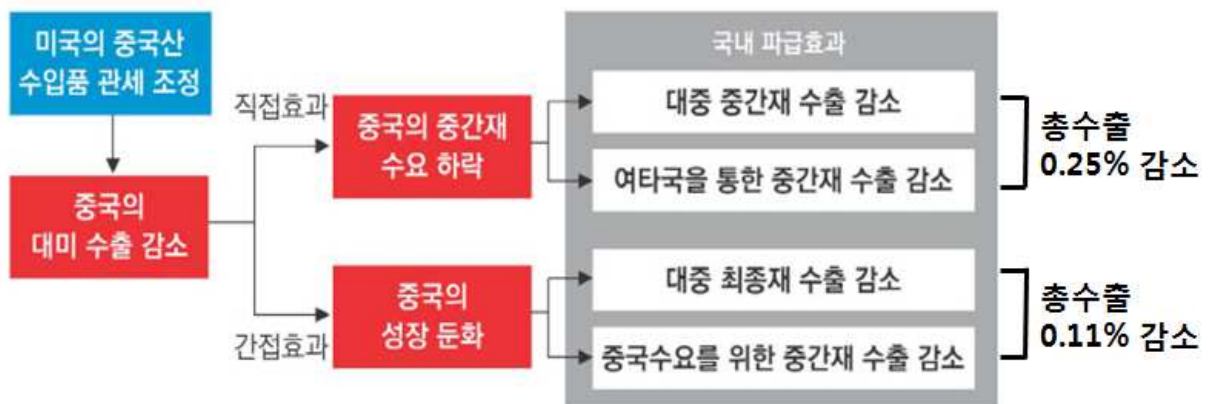
- (중국 대응) 단기적으로 적극적·공세적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제블록 확장에 노력할 전망
- 미국 경제의 중국의존도로 볼 때 미국 정부의 일방적, 극단적인 강경 행보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 중국에는 약 2만개의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
 - 최근 미국 자동차업체인 GM의 중국 합자법인 상하이GM에 대한 반독점위반 조사 실시, 미국 의료기술업체 메드트로닉에 대한 거액 벌금 부과 등 다양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예고했으나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
- 장기적으로 중국,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을 통해 중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할 가능성도 제기
 - 중국 사회과학원은 미국의 TPP탈퇴는 중국의 경제외교에 긍정적이며 향후 RCEP, 일대일로,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평가

(참고자료 2 참고)

4.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 미·중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한국 수출 악영향 불가피

-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시 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및 중국 수출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 등 직·간접 경로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파급 가능
-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 68.7%, 최종재 31.3%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은 0.36% 감소하며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하는 환율감시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높은 우리나라, 일본도 포함돼 있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가치 절상 압력 발생 가능
-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고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돼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2013년부터 증가해 현재까지 총 21건(반덤핑 및 상계관세)이 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9건이 중국과 함께 제소됨.

< 미국의 對한국 조사개시 건수 >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0)	3 (0)	2 (0)	4 (3)	4 (0)	7 (4)	6 (2)

주: () 안은 중국과 함께 조사개시된 건수

-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이 특정 국가 대상이 아닌 첨단 주력 산업 중심으로 실시될 경우, 중국의 육성 산업군과 상당수가 유사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가해질 우려
-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휴대폰, PC 등에는 보호장벽을 줄이고, OLED, 웨이퍼, 배터리 등 필수 원재료·부품 시장의 보호주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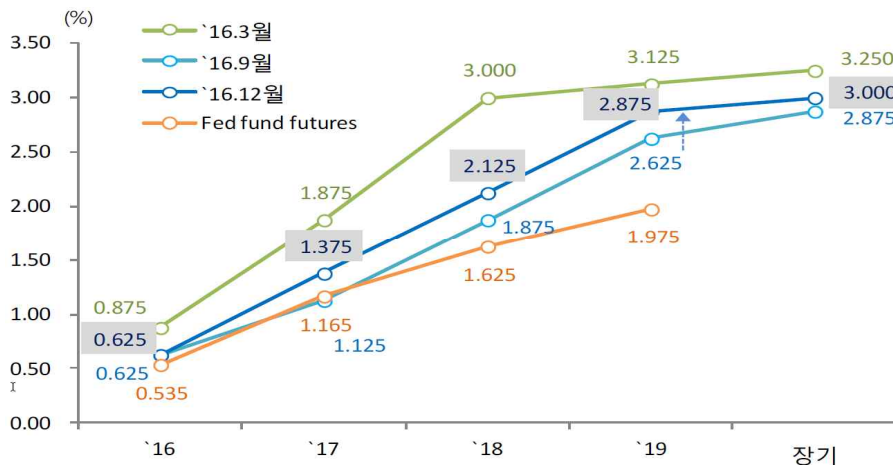
II. 미국의 금리인상의 전개 방향과 영향

1. 미국의 금리인상 방향

□ 미연준은 2017년중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미연준은 12월 FOMC에서 1년만에 기준금리를 25bp(0.25%~0.50% → 0.50%~0.75%) 인상함
 -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물가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경제가 점진적인 속도로 확장
 - ※ 실업률(%) : 4.9('16.8) → 5.0(9) → 4.9(10) → 4.6(11)
 -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1.1('16.8) → 1.5(9) → 1.6(10)
- FOMC위원은 기준금리가 2017년중 3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망
 - 미연준은 2017년중 3차례 인상을 통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38% 수준을 2018년말에는 2.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시장에서는 Fed-funds 선물 금리가 17년말 1.165%, 18년말 1.625%로 평가되는 등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장의 내년 금리인상 확률은 1월 15%, 3월 36%, 5월 48%, 6월 77%로 하반기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
- 향후 미연준 정책방향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에 영향을 받으며 완만한 행보를 유지할 전망

<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치 및 선물시장 평가 >



2 . 금융시장의 영향

□ 금리 상승 및 미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

- (금리)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트럼프 정책 등이 반영되어 추가적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단기금리는 미연준 금리인상 수준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나 장기금리는 경기개선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지 않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미금리의 상승에 따른 자금이동의 영향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금리상승 도미노 현상 발생 가능
 - (환율) 미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보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통화대비 강세폭이 확대될 전망
 - 선진국 통화의 경우 '16년말 이미 미달러화 대비 큰 폭(유로화 -8%, 엔화 13%)으로 절하되었고 '17년중 금리차 확대가 제한되며 절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신흥국 통화의 경우 11/8 이후 터키(-10.7%), 멕시코(-10.1%)는 10% 이상, 폴란드(-7.6%), 헝가리(-7.6%), 남아공(-6.7%), 말레이시아(-6.2%), 브라질(-6.0%), 체코(-5.7%)는 5% 이상 절하되어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낮음
 - 특히, 수출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달러화 강세 지속은 기업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경기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미정부가 더 이상의 빠른 절상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GDP대비 수출비중 : 8%(2000년) → 12%(2015년)

< 주요 IB의 환율 및 금리 전망 >

		'17. 1/4	'17. 2/4	'17. 3/4	'17. 4/4
환율	달러/유로	1.04	1.03	1.05	1.06
	엔/달러	115	115	115	115
	위안/달러	7.00	7.05	7.10	7.13
금리	미국채 10년물	2.40	2.52	2.61	2.70
	독일 BUND 10년물	0.35	0.40	0.50	0.64

자료 : Bloomberg, 12월 27일 기준

3. 주요국 및 신흥국 영향

□ 유럽 및 일본은 통화약세로 대미수출 개선, 중국은 자금유출 압력 심화

○ (유럽)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 유지 및 연이은 정치 이벤트에 따른 정정불안 가능성으로 유로화 및 파운드화가 약세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대미 수출도 개선될 전망

-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근원 CPI 3개월 연속 0.8%)로 '17년 3월 종료 예정인 양적완화 정책 9개월 연장
- '17년 상반기중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 하반기에 독일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극우극좌 정파가 약진 중
- 미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10% 약세시 유로존 수출은 약 0.8% 개선됨

< 유로/달러 환율 10% 약세시 거시경제 영향 >

	명목수출(%)	인플레이션율(%p)	경제성장률(%)
독일	0.72	0.07	0.07
프랑스	0.83	0.06	0.03
이탈리아	0.70	0.05	0.06
스페인	0.84	0.10	0.01
유로존	0.78	0.07	0.05

자료 : Nomura 추정치, 국제금융센터 재가공

○ (일본) 미달러화 강세로 긍정적 효과가 큰 국가로 평가됨

- 엔화가 평가절하되며 엔화약세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다소 완화되어 일본정부의 정책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
- 엔화 약세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일본기업 ROA 추이(%) : 2.8('12) → 3.2('13) → 3.5('14) → 3.6('15)

○ (중국) 자금유출로 위안화 약세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화절상 압력이 상충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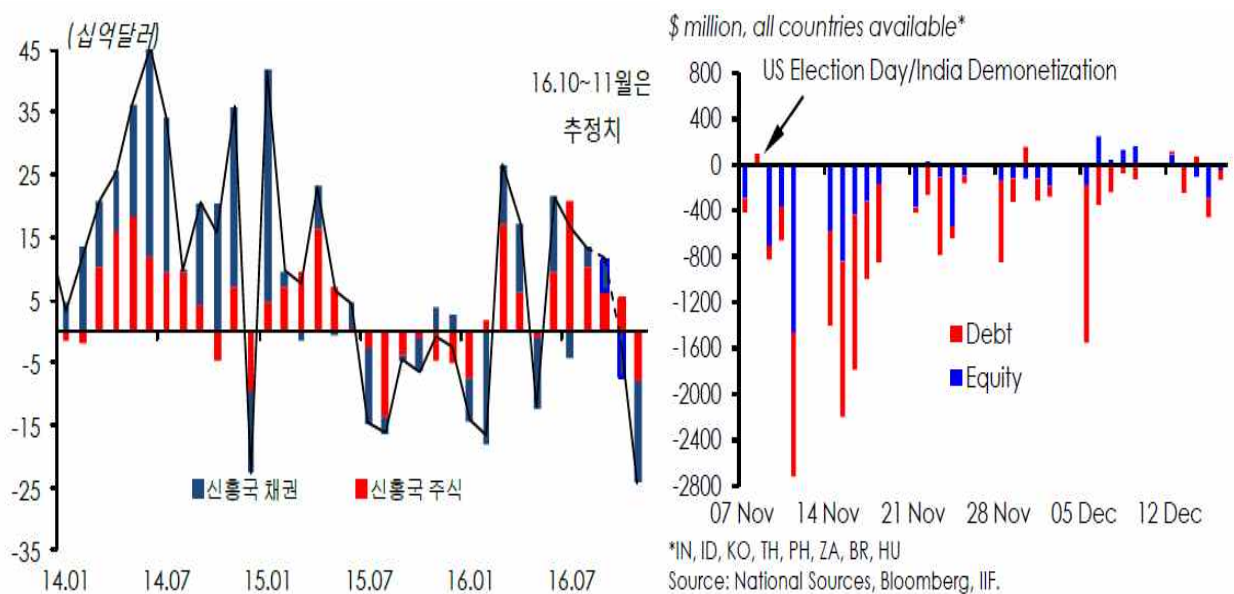
- 위안화의 절상 및 절하 요인이 상충되며 미중 양국간 통상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

※ 미중 양측이 11%의 보복관세를 부가할 경우 중국 성장률 0.3%p 하락

□ (신흥국 영향) 자본유출로 통화평가 절하 및 금융·외환위기 가능성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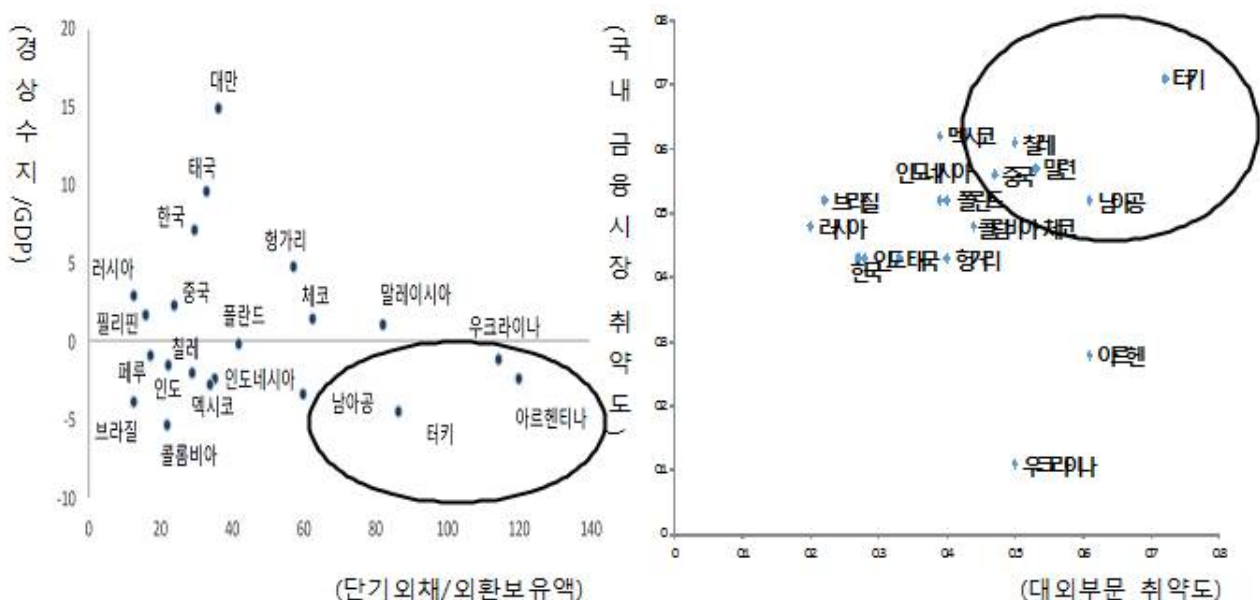
- (현황)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중 신흥 25개국 포트폴리오 자금은 약 242억달러 유출됨(주식 : -81억달러, 채권 : -161억달러)
 - 인도, 태국, 대만 등 신흥아시아(-158억달러)가 주도하는 가운데 남미(-24억달러), 신흥유럽(-39억달러), 중동 및 아프리카(-21억달러) 등임
 - 멕시코, 인도, 터키의 통화가치는 사상최저,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전망)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규모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추가적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변동 가능
 - 신흥국 자본유출은 일반적으로 이벤트 발생 이후 30일간 크게 반응하고 그 이후 다소 완화되며 영향이 90일 정도 지속됨
 - ※ 글로벌 금융위기시 90일간 정도 지속적으로 자본유출되었으며, 2013년 테이퍼링시에는 30일간 급격하게 유출된 후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순유입은 90일 이후 이루어짐

< 신흥국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현황 >



- (요주의 국가) '13년 테이퍼링 당시에 비해 대다수 신흥국의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개선되었으나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등이 위험국으로 분류됨
 - (경상수지) 대다수 신흥국이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콜롬비아(-5.2%), 터키(-4.4%), 페루(-3.8%), 남아공(-3.3%)은 GDP 대비 3% 이상 적자 상태임
 - (단기외채) '13년 대비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했으나 터키(86.7%), 말레이시아(82.4%)의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은 80% 이상의 높은 수준, 체코(62.5%), 남아공(59.9%), 헝가리(57.2%)는 50% 상회
 -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 외국인국채보유잔액/총국채발행잔액 비율은 페루(40.9%), 인도네시아(39.2%), 말레이시아(35.8%), 남아공(35.3%) 등이 높은 수준임
 - 국내 금융시장 취약도*와 대외부분 취약도**를 같이 평가할 경우에도 터키, 남아공 등이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됨
- * 국내 금융시장 취약도는 가계 및 기업부채 규모, 민간부문 신용증가율, 외국인 금융시장 참여 비중, 주택가격 등으로 평가
- ** 대외부분 취약도는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대외채무 및 단기외채 규모, 실질실효환율 등으로 평가

< 단기외채/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 < 대외부분 및 금융시장 취약도 >



4 .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 (미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기업 채산성 개선에 영향을 주지만 가격경쟁력 회복은 크지 않을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원화 약세에 따른 원화표시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및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교역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
 - 원화환율 상승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ICT,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킬 전망
 - 원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쟁국 통화인 엔화 및 위완화의 동시 약세로 가격경쟁력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 할 전망

< 주요 IB의 환율 전망 >

	'17. 1/4	'17. 2/4	'17. 3/4	'17. 4/4
원/달러	1,200	1,203	1,210	1,210
원/100엔	1,043	1,046	1,052	1,052
원/위안	171	171	170	170

자료 : Bloomberg, 12월 27일 기준

- (금리상승) 국내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이탈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리 인상시 주식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발생하나,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여타 외부충격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 국내 내수 경기의 부진 지속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이 용이하지 않아 시장금리 상승이 제한될 전망

< 주요 IB의 국내 금리 전망 >

	'17. 1/4	'17. 2/4	'17. 3/4	'17. 4/4
기준금리	1.15	1.10	1.10	1.10
국고채 3년	1.61	1.59	1.65	1.74
국고채 10년	2.16	2.18	2.26	2.32

자료 : Bloomberg, 12월 27일 기준

작성자	산업경제팀장 이 재 우 선임연구원 김 윤 지
-----	-----------------------------

- 참고자료 1. 미국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현황
2. 신규 다자 무역협정 추진 현황

(참고자료 1)

< 미국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현황(2015년) >

단위 : 십억달러

순위	국가	교역량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전체	3,746	1,505	2,241	-736
1	중국	598	116	482	-365
2	캐나다	576	280	295	-15
3	멕시코	531	236	295	-58
4	일본	194	63	131	-69
5	독일	174	50	124	-74
6	한국	115	44	72	-28
7	영국	114	56	58	-1.4
8	프랑스	78	30	48	-18
9	대만	67	26	41	-15
10	인도	66	22	45	-23

자료: 무역협회

신규 다자 무역협정 추진 현황

-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내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주장해 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PP 체결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해 온 **신흥국 타격 전망**
 - ※ 2015년 10월 타결되어 각국의 국회 승인 뒤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 내 국회 비준을 포기해 사실상 무산 전망
 -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TPP 도입시 미국내 산업별 재배치**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일자리 및 생산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
- **(RCEP) TPP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부상하고 있으며, 타결시 세계 무역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변화될 가능성 존재
 - TPP는 최근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RCEP는 **관세 65% 축소** 등을 지향하고 있어 TPP보다 경제적 효과는 작다는 평가
 - 하지만 RCEP 체결시 **아시아 제조업 밸류체인**의 강화로 참여국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의 경우 가입시 2025년까지 GDP 4%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
- **(FTAAP)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RCEP와 함께 자국 주도의 2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도 제안**
 - ※ 20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첫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4년 회의 때는 FTAAP 설립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 바 있음(우리나라 포함).
 -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하고 'FTAAP에 관한 리마선언'도 채택했으나, 아직 참여국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단계

- RCEP, FTAPP 등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제외한 협정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어 국가별로 셈법은 다를 것이라는 평가
- RCEP, FTAPP 등이 회원국 내에서 TPP에 필적할 경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의 확장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논의중인 다자간 무역 협정 비교>

	TPP	RCEP	FTAAP
명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주도국	미국	중국, 아세안	중국
참여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총 12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총 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APEC 21개국)
GDP비중	37.1%	28.8%	60%
교역비중	26.3%	28.8%	50%
특징	선진국이 중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강조	관세 축소를 통한 교역 확대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주안점	APEC 참여국간의 전면적 FTA 개념으로 선진국, 신흥국 의견 조율 중